

2월 첫째 주 정세동향

2010년 2월 4일 목요일

<차례>

1. 세계경제

- 재무부, 금융위기책임세 부과 방안 발표
- 미 행정부, 금융규제개혁 방안 추가 발표
- 2010년 남북경협 전망

2. 국제정세

- 세계사회포럼
- 유럽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3. 한국경제

-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삼성경제연구소)
- Job Sharing의 확장모델: 일본기업의 'Two Jobs' 사례를 중심으로(삼성경제연구소)

4. 한국정세

-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5. 노동

- 총연맹
 - 총연맹 6기 임원선거 및 정기대대
- 금속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 쌍용자동차 지부 임원선거 돌입
 - 금속노조 26차 정기대대
- 공공부문
 - 전교조, 전공노 정당가입 혐의 수사

■ 세계경제

1. 재무부, 금융위기책임세 부과 방안 발표

- 미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과하는 방안을 발표(1/ 14).
- TARP의 근거법인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2008.10월)에서는 TARP 집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까지 TARP 손실분 전액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전할 수 있도록 명시. 부과대상은 금융위기중 정부의 긴급지원조치를 받았던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 부과기간은 TARP 손실분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 (재무부는 1,170억 달러로 예상되는 TARP 손실분을 향후 12년에 걸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금융위기책임세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해 부채에 연동하여 산정. (연간 금융기관 부채(= 총자산 - Tier 1 자본 - FDIC 보증 예금)의 약 15bp를 책임세로 부과)
- 한편 월가는 TARP 자금을 지원받은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TARP 손실의 대부분이 자동차 회사(GM, Chrysler)와 국책 모기지업체(Fannie Mae, Freddie Mac)에 기인한다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 크게 반발. 금융기관들은 총 3,146억달러의 TARP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1,619억 달러를 상환. 한편 주요 대형 금융기관들의 경우 Citigroup을 제외하고 모두 원리금을 상환.

2. 미 행정부, 금융규제개혁 방안 추가 발표

-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기관의 위험감수 억제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1/ 21). 미 행정부는 2009.6.17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제 강화, 소비자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종합적인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1) 배경

- 금융시장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운영은 위기를 초래했던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함. 더구나 지난해 금융기관들의 높은 수익이 구제금융 수혜 등으로 가능하였으나 임직원에게 대해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기피.

2) 주요 내용

- 은행 및 은행을 소유한 금융기관이 헤지펀드, 사모펀드 및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operation) 부문을 소유하거나 투자 또는 지원하는 것을 금지. (자기매매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체조달 자금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부채 측면에서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예금시장 점유율 상한선(10%)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이를 통해 금융부분의 인수 합병(consolidation)을 제한.

3) 향후 일정

- 오바마 행정부는 수주내에 Dodd 상원 금융위원장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규제의 사각지대(loophole) 제거, 대마불사 불식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 향후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하원의 금융개혁안(The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과의 조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하원의 금융개혁안은 금융기관의 규모와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담고 있지 않으나 감독기관에 대해 대형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감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4) 시장 반응

- 시장에서는 향후 대형 금융기관의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JPMorgan은 자기매매 거래 제한으로 2011년중 5개 주요 은행의 수익이 약 1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발표 당일 대형 금융기관의 주가가 큰 폭 하락(Bank of America -3.7%, Morgan Stanley -5.2%, Goldman Sachs -4.2%, JPMorgan -3.4%, Citigroup -0.6%).

3. 2010년 남북경협 전망

* 출처: 홍순직, '경협 확대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 시급', "통일경제" 2010년 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 2009년 11월말까지의 남북간 총교역은 14억 6,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약 13.9% 감소. 남북간 총교역은 2008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 9월부터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되면서 남북경협도 회복세를 시현.
- 남북간 총교역을 상업적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북 쌀·비료 등 지원성 사업인 비상업적 거래가 82.5%나 감소했다. 상업적 거래도 금강산·개성관광사업 중단에 이어 일반교역마저 대폭 감소함으로써 11월말까지 전년 동기비 9.4% 감소.
- 한편 상업적 거래 중에서도 남북교역은 방북제한과 수출주문 감소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등으로 20% 이상 감소했으며 특히 일반교역은 전년동기비 약 40%나 큰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투자협력사업은 1~8월까지의 전년동기비 17.4% 감소에도 불구하고 9~11월 개성공단사업 등이 51.2% 회복됨으로써 11월 말 현재 전년동기와 비슷한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2009년에 협력사업 승인 건수는 민간경협사업 1건과 개성공단 사업 5건 등 총 6건으로 지난해 62건의 1/10에 불과하다.
- 개성공단사업은 11월 말 현재 116개 기업이 북한 근로자 42,000여 명을 고용하면서 가동 중에있다. 11월말까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교역은 약 8.1억 달러로 남북간상업적거래 14.4억 달러의 약 56.2%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입주기업과 북측 근로자수는 전년동기비 각각 32.2%, 16.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수출은 오히려 2.8%, 26.7% 감소했다.
- 북한 내부적으로도 후계체제 구축과 화폐개혁의 후유증 완화 그리고 2012년 경제강성대국 건설등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1~11월까지김위원장의 현지 지도는 총148회로 2008년 95회보다 많았을 뿐 아니라 이 가운데 경제분야는 62회로 예년의 2배 정도였다. 특히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례적으로 경공업과 농업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앞서 강조하였다. 또한 자력갱생이란 용어 대신에 '대외시장확대' 및 '대외무역활동적극화' 등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후반기부터의 대남 유화적 제스처와 경협확대에 대한 구애적 태도가 201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에는 개성공단사업의 정상화와 개성·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 등이 기대된다. 북한의 12.1 조치 해제와 중국·베트남 등지로의 남북합동해외공단시찰단 파견, 정부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사업계획,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확대, NGO와 지자체들의 의욕적인 협력사업확대 계획 등은 2010년 남북경협 전망에 긍정적 요인들이다. 다만 남북경협 역시 서행과 담보의 북핵해결전망으로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우선은 인도적 사안과 단기현안과제에 대한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동반자로서의 진정성을 상호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측이 먼저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사업의 경우에도 2단계 사업 착공은 차치하고 1단계사업이라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제기한 기존계약 무효화선언의 종결과 법·제도적장치 마련, 4통(통행 통관 통신 통근) 문제해결,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과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전략물자반출 허용 등의 사안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대북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분유와 비타민 지원, 탁아소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등의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나무심기와 탄소배출권 사업을 연계한 사업이나 태양열 및 풍력 조력 등의 대체에너지사업 등 남북상생의 녹색성장 사업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수 진보의 이념논쟁이나 퍼주기 논쟁에도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상호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끝>

■ 국제정세

1. 세계사회포럼

세계사회포럼, 위기 낳은 자본주의 질타. '민중운동선언' 내고 폐막(1/31 한겨레)

(*브라질에서 열린 행사에 대한 기사. 올해는 세계사회포럼 집중행사 없음. 연중 세계 각지에서 포럼을 이어갈 계획)

1월 29일 세계사회포럼(WSF) 폐막. 50여개의 각종 제안을 담은 '민중운동선언'을 발표. 농업개혁, 시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국군 기지 설치 반대, 자유주의 정책 배격 등.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시와 인근 5개 도시에서 3만5000명이 참석.

세계 경제위기를 막지 못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 표명함. 세계사회포럼은 중남미 지역의 미군 기지 설치와 미국 정보요원들의 활동에 반대하는 세계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힘. 또 미국이 제국주의 의도를 갖고 온두라스 쿠데타를 사실상 지지했고, 쿠바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남미 좌파정권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규정함.

종료 후에도 후속 행사를 계속 열기로 했는데 올해 4월19일~22일에는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에서 '대안 기후회의'가 열리고, 8월에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도 별도 행사가 마련. 내년 세계사회포럼은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열릴 예정.

International Viewpoint (2010년 1월호)

목표는 달성되었다.

-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선언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포럼이 열릴 때 마다 참가자가 늘어남. 지난 10년 간 정치적 영향력이나 언론의 관심은 줄어듦. 10년 전만 해도 세계사회포럼의 비판과 제안은 다보스에서 선언만큼이나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포럼을 여러 대륙별, 지역별로 탈중심화하면서 지역의 운동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한 것. (지역별 - 미국, 유럽, 아시아, 지중해연안, 남부 아프리카 사회포럼. 국가별 - 이탈리아, 인도. 지방별 - 리버풀, 보스턴 사회포럼 등)
- 많은 사회운동들이 세계사회포럼을 거점으로 삼으면서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 낸 것.
-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에는 위험 또한 내재한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7차 포럼에서처럼 포럼이 정례화되면서 관성화 되는 문제, 시민단체화되는 경향, 진정한 사회운동단체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향 등. 하지만 포럼은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작년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함. 또 최근에는 세계사회포럼이 그 무엇보다 사회운동들에 있어 유용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 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 유럽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

SWP (Socialist Worker, 2월 6일자)

공공병원에 대한 지출 삭감. 북부 런던에서는 "위팅튼 병원 살리기" 운동 진행 중.

교육지출 또한 삭감될 예정. 이렇게 되면 이번 가을에 1/3의 학생들의 대학교육 접근권이 없어짐. 브라이튼, 런던, 글라그고우 등에서 학생, 강사, 교수들의 투쟁 지속.

정부는 저임금의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을 논의하고 있어 27만명의 공무원들이 이번 주 파업 투표에 들어감.

NPA, 1/28

1975년 낙태합법화된 이후 다시는 낙태에 대한 논쟁이 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가톨릭 등의 낙태반대론자들은 언제나 낙태

를 불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요구.

최근 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을 삭감하면서 낙태 센터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되고 있다. 여러개의 작은 낙태 센터가 통합운영되는 방식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3.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1)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출구전략 회의(1/28 런던에서 개최)-화해정책 기조로 탈레반에 지원금으로 회유, 부족회의 참석요구, 5년 안에 아프간 정부에 영토 관할권 넘기는 출구전략 계획 구상.

;70여개국 대표들은 1년 내 1억4,0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탈레반 회유 자금을 쓰기로 합의. 대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은 실효성 없을 것이라 전망. 탈레반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아프간 전역으로 확보하여 마약 밀매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고, 설사 정착금을 받아 탈레반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생명이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음.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런던회의 이후 탈레반에게 화해 수용을 촉구하며 부족회의(지르가)에 참석할 것을 요구. 알카에다는 화해 정책 대상에서 제외.

;아프간군은 향후 3년 내에 영토 절반가량의 관할권을 인계받은 뒤 5년 안에 전역을 통제할 계획.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일부 지역 관할권 아프간정부로 넘겨. 국제안보지원군 규모는 13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기로 함.

;탈레반 측은 "런던회의는 세계인을 기만하려는 선전 전술"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침략자들은 아프간에서 즉각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 탈레반이 특사가 유엔과 접촉했다는 설도 일출.

2)파키스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습을 감행해 18발의 미사일을 난사하면서 현지 무장단체 대원 10명이 사망. 이날 공습 규모는 미 중앙정보국 CIA가 파키스탄 북서부 국경지대에 대한 무인기 작전을 시작한 지난 2008년 중순 이후 최대 규모. 이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3차례의 무인기 공습이 감행,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키물라 메수드가 사망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음.

3)PKO법

;UN의 평화유지활동(이하 PKO) 참여를 목적으로 한 상비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 12월 29일 국회통과. 이 법안의 6조는 파견기간 1년 이내, 1000명 범위의 PKO파병에 한해 파견지·파견기간·임무 등을 'UN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때문에 '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음. 유엔과 파병에 필요한 구체적 준비를 마치고 나서 형식적으로 국회 동의를 구하는 꼴이기 때문.

;이명박 정부가 PKO법 통과 직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등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파병하기 위해 현재 400명 규모인 평화유지군 참여규모를 내년부터 1천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힘. 외교통상부는 2009년 12월 31일 한국국방연구원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참여규모를 1천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아프리카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파병에 나서겠다고 함.

;국방부는 1월 20일 "유엔과의 협의와 협조조사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아이티에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파병 동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작년 말에 통과된 PKO 파병 법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함. 2월 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9~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되면 이달 내로 250명 규모로 파병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경제

□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삼성경제연구소, 1/27)

I. 경제위기 극복

1. 출구전략 시행 시기의 신중한 선택

① 2010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

- 2010년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5.1%,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되어 2010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임

- 2010년 중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0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하반기의 경기둔화 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② 재정건전성 강화는 2011년부터 시행

- 재정지출 축소, 세율인상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경기회복이 확인되는 시점인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더블딥에 대비한 내수 활성화

① 내수의 경기완충능력 강화가 절실

- 수출의존형인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부충격에 대한 내수(민간소비+총고정투자)의 완충기능 미흡 및 자생적 회복력 부족을 노출했음

- 2010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축소와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수반되는 원화절상 압력 등으로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임

② 가계소득 안정 및 투자유인 제공

- 고용기반 확대와 가계대출 부실방지를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고해야 함

-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투자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

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심각

- 일자리 감소세가 둔화되과는 있으나 여성·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고 취업애로층이 18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고용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황임

② 임금·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와 구인·구일자 간 미스매치 해소

- 임금체계의 개선과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여성 및 청년 인력 등의 고용을 확대해야 함: 시간제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공공분야 대민 서비스 부문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확대하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함

- 전 산업 종사자의 88.4%(2007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채용활동과 재직자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함

4. '신3고'의 수출악재에 대비

① 상대적으로 선전한 2009년, 낙관할 수 없는 2010년

- 2009년 한국수출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13.9% 감소했으나,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선전함

-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신3고'(고원화, 고금리, 고원자재) 및 신흥국 시장 경쟁 격화 등 수출여건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제고가 시급함

②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며 신흥국 시장 경쟁격화에 대비

- 신3고 상황에서 기업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연력과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조해야 함

II. 안정적인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5. 외환시장 체질개선

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환율급등 등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음
- 외환시장 불안정성은 취약한 외환시장 인프라와 외국인 주식투자 및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과도한 쏠림현상에 기인함

② 인프라 개선 및 건전성 제고로 외화 수급관리를 강화

- 취약한 외환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함
- 국제공조, 시장 경고장치, 핫머니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외화의 단기 유출입에 따른 시장교란 요인을 억제해야 함

6.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

①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상승 불안이 상존

- 최근 주택시장은 하향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지적 부동산 가격급등 등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②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되 국지적 시장불안에도 대응

- 현 주택경기 활성화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시장안정대책을 병행해야 함
- 주택공급 확대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출규제로 시장불안 심리 발생도 차단해야 함

7. 복합적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

① 친서민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갈등조정 활성화

- 불황후유증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복합적인 사회갈등을 완화·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 경기회복의 탄력을 배가하려면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 나아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② 갈등유발 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제시

- 불황후유증이 취약계층의 빈곤화와 사회병리현상으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서민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사업 구조조정의 경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지역발전체제를 제시하여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의 입지갈등 확산을 제어해야 함
- 갈등발생을 유예 또는 봉합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세부기준을 확립해야 함: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노노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해야 함

III. 신성장기반 마련

8.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충격 완화

① 노동수급 장애 및 노령빈곤 가중 우려

- 2010년부터는 1984년 이래 지속된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노동공급을 주도하면서 지역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고령자들의 소득기반이 취약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할 경우 갑작스러운 생활수준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함

② 고령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금융소득 기반을 확대

- 고령자 고용에 적합한 급여제도 및 직무를 개발·확산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속도를 완화해야 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지역 및 업종 단위 기업연금 가입을 허용하여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기반

을 확대해야 함

9.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① 국제 정치·경제 질서 전환은 국가위상 제고의 기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지형변화가 가속화되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도 전환기에 진입함
-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 과감한 경기부양정책 추진, 해외시장에서의 선전, G20 정상회의 참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②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격 제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

-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의제설정 및 논의 등을 주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에 주력해야 함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곤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해야 함
- 경제적 위상 강화와 국제화 진전에 부합하도록 이민정책 개선 등을 통해 다문화 수용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신흥국과의 국제적 협력도 확대해야 함

10. 저탄소경제의 인프라 구축

①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녹색산업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추진되면서 세계적으로 녹색이 새로운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함

② 정부 지원의 3대 축: R&D 확대, 사업화 지원, 수출경쟁력 제고

- 2010년 1월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함
- 정부는 R&D·사업화·수출경쟁력을 3대 축으로 하여 구체적인 녹색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신성장 동력화에 주력해야 함

□ Job Sharing의 확장 모델: 일본기업의 ‘Two Jobs’ 사례를 중심으로(삼성경제연구소, 1/28)

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 중고령자의 노동력 활용 문제가 이슈

-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 약 10만 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33만 명이 55세 정년을 맞을 전망이다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로 활성화되기 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 중고령자의 활로, ‘Two Jobs’

1) 겸업시대의 도래

- 겸업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과 중고령 근로자의 소득감소 우려를 해결해주는 윈-윈형 고용형태임
- 직장인의 15%가 겸업을 실시하고 겸업지원 전문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직 및 미래개척형 겸업이 증가할 전망이다

2) 겸업의 효과

- 중고령자에 대한 겸업 허용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임

① 청년층 고용확대에 기여

- 중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청년층과의 상생적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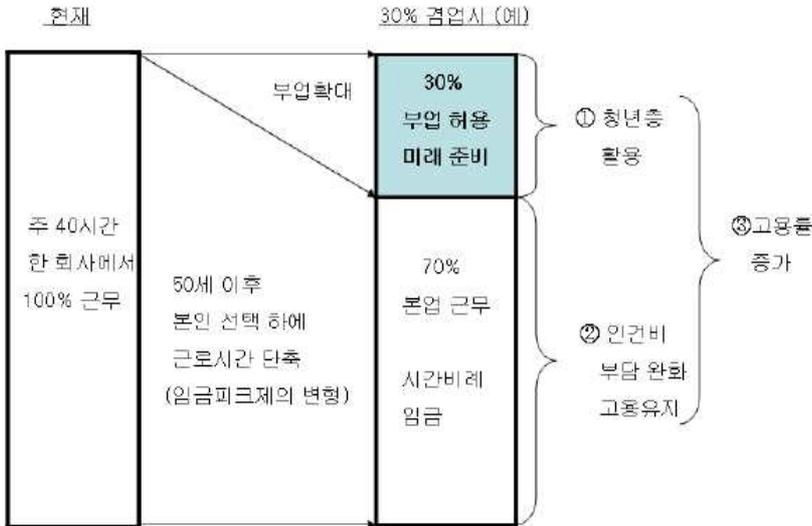
② 미래를 준비하는 점진적 은퇴

- 스위치 온-오프 인생에서 벗어나 점진적 퇴직과 새출발이 가능함

③ 유연근로의 확대로 고용률 증가

- 고용 아니면 실업이 아닌 새로운 고용형태를 형성함

- 단시간 근로, 파트타임 등 유연근로가 활성화되고 고용률이 증가함



3. Two Jobs 활성화의 전제조건

1) 기업: 겸업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정립

-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함
- 기업은 중고령 친화적인 겸업 가능직무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함

2) 개인: 직업윤리 정립 및 준수

- 철저한 직업윤리 정립과 준수로 겸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함
- 회사가 겸업을 허용해준다면 스스로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3) 정부: 차별금지(시간비례) 원칙의 준수 및 지원

- 시간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기업의 복리후생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 겸업 선택 시 임금 감소분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을 강구해야 함

■ 한국정세

1.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2009년 11월 30일 구권 1 대 신권 100, 미화 1달러 대 북한신권 1원의 공식환율 1: 96.9로 발표됨. 이번 화폐개혁의 특징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던 우왕좌왕하는 정책혼선. 기구당 10만원→10만원+1인당 5만원, 4인가족 30만원으로 정정. 환율 역시 한참 지나 당국에서 겨우 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정도로 북한 경제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화폐개혁의 배경

-경제적 배경: ▲과잉된 화폐량 회수 ▲인플레이션 해소 ▲당국의 재정능력 회복 ▲계획경제기능 강화 ▲국가경제질서 회복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간 격차 해소. 화폐개혁 이전 북한주민 평균월급 2,500-3,000원 시장 쌀 1kg 2,800원.

-소비재 생산감소로 화폐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속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당국의 화폐증발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의 악순환 구조화. 결국 자유시장의 급격한 확대 속에 계획경제기능과 중앙집권적 통제질서를 붕괴시키고,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과의 엄청난 격차로 시중의 외화가 재정당국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시장을 통해 해외로 대거 유출. 경제난으로 주민들은 식량, 소비재 해결을 위해 국가통행질서를 무시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각종 불법거래들이 일상화

-정치적 배경: ▲경제난으로 인한 중앙집권적 정치질서의 파괴. 1945-1998년 사이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국가계획경제의 공백을 시장이 파고들면서 가장 하위계층에서 소위 '성공자'들이 성장하고, 정치적 신분제도까지 바꿀 정도로 정치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핵심계층의 위기를 불러옴. 결국 체제의 유지를 위해 시장의 '성공자'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이번 화폐개혁의 하나의 목적. ▲화폐를 통한 정치적 선전으로 후계체제 공고화. 후계자는 화폐의 그림을 통해 선대 통치자의 이상화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기 충성심도 함께 보여주고 싶어함. 이번 화폐개혁에서 김정일의 정책과 성공사례들이 대거 담겨있음.

향후전망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와 식량사정의 악화. 북한당국은 화폐개혁 후속조치로 국정가격 전면 재조정. 새로 공시된 국정가격들은 기존의 가격보다 3-4배 높게 책정되면서 인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ex> 국정운임이 너무 높아 노동자 월급으로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 쌀값이 화폐 교환 조치 이후 한 달 반 만에 10배 상승 등.

-북한 박남기(76)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작년 12월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20일쯤 해임됐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보도. 박남기는 1986년 12월 인민경제를 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장에 발탁된 이후 자본주의적 개혁 세력인 내각의 박본주 총리와 내부 투쟁을 벌여옴. 박남기의 해임은 실질적으로 화폐개혁을 주도한 '김정은 후견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관측이 나옴.

-화폐개혁 이후 북한당국은 중앙집권적 계획기능회복을 위한 극단적 조치들을 지속. ▲종합시장 폐쇄, ▲내국인 외환거래 및 사용 전면 중단 ▲개인영리기업 몰수 ▲국정물가 인상 ▲밀수 밀매의 단속 강화 ▲국경지역 단속강화 ▲시장에서의 상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부패관료들에 대한 대대적 감사, 숙청 ▲중앙집권적 계획 및 배급체계의 강화 ▲물질적 인센티브제 및 기업의 경영자율화 축소 ▲노력동원 체계의 강화

-국가의 경제적 공급기능을 안정적으로 대규모로 늘리지 않는 한 중앙집권적 통치질서의 붕괴는 불가피. ▲중국의 대규모 경제적 지원 ▲북-미 협상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대규모 대북지원 유도 등이 방안일 수 있음.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북한당국은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개방과 개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노동

1. 총연맹

1) 총연맹 6기 임원선거 및 정기대회

- 당선자

선거명	후보	유효표	득표율(%)	당선여부
위원장 사무총장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376	52.0	당선
	기호2번 허영구/이정행	275	38.0	낙선
부위원장 일반명부	기호2 양동규	336	46.4	낙선
	기호3 정희성	408	56.4	당선
	기호4 주봉희	314	43.4	낙선
	기호5 정승호	250	34.6	낙선
	기호6 정의현	108	56.4	당선
	기호8 배강욱	325	45.0	낙선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1 정혜경	560	77.5	당선
	기호4 노우정	509	70.4	당선
회계감사	기호1 조준성	519	71.8	당선
	기호2 최동식	648	89.6	당선
	기호3 현정희	624	86.3	당선

2. 금속

1)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 사측은 대규모 해고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노조 측에 제시, 노조와 사측은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을 맞아 조기 교섭을 하기로 합의, 1일 교섭을 진행.
- 이 자리에서 사측은 1377명 인력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워크아웃 지구안을 내놓고 노조의 서명을 요구함. 그러나 노조를 반발하며 거부, 향후 임시대대 및 조합원 교육 등을 거쳐 거취를 결정예정.
- 사측의 주요 안은 △해고 371명, 도급화 1006명 △임금 22% 삭감 및 정기호봉승급 동결 △ 단체협약 변경 등. 단체협약은 유급휴일 및 연월차 휴가 축소, 복리후생 축소·폐지 등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 권익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총 38개 항목을 수정하는 안이 제시됨.

2) 쌍용자동차 지부 임원선거 돌입

- 쌍차지부 임원선거가 시작됨. 자·수사 후보에 등록된 후보는 황인석 정리해고특별위원회(아래 정특위) 조직총괄팀장, 수석부지부장에는 장영규 정특위 부의장, 사무국장에는 지선열 정특위 사무장이 후보로 등록. 또한 부지부장 후보로는 옥쇄 파업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금주 동지가 출마.
- 선거운동은 4일까지, 5일부터 7일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선거 가능 조합원 수는 554명이고 선거와 함께 창원, 정비지회 임원선거와 비정규직지회의 1사1조직 통합을 묻는 투표도 진행할 예정.

3) 금속노조 26차 정기대대

- 금속노조는 26차 정기대대를 27일 열고 2010년 사업계획을 통과.
- 통과된 사업계획은 노조 산하 모든 교섭단위는 2월안에 △전임자 수 및 활동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제히 특별단체교섭 또는 보충교섭(아래 특별교섭)을 일제히 요구.
- 이어 3월 한 달 조합원 교육과 선전을 통해 조직의 힘을 다지고 4월 초 조정신청을 거쳐 4월 중순 파업결의까지 이끌어 낸다는 계획. 이 과정에서 특별교섭의 개별합의 없이 통일적으로 전선을 유지하기로 함. 이와 관련한 세부 사업의 집행은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되어 특별교섭 요구 발송 등 구체적인 일정은 수일 안에 확정될 것임.

3. 공공부문

1) 전교조, 전공노 정당가입 혐의 수사

- 1월25일 경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계좌압수수색과 연말정산내역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개인 계좌에서 특정정당에 돈이 들어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으로 해킹했다는 의혹이 발생.
- 이에 2월1일 전교조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을 허위사실유포 등의 죄로 고소. <끝>